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 도 자 료</h1>	2016. 11. 25 (금)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박진호 / 서기관 박정용 (Tel. 044-200-2049)
<p>* 엠바고 : 즉시 사용</p>			

정부, 주요 민생대책 추진상황 집중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 11.25, 1차 민생대책 점검회의 열어,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민생대책 점검 -

-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각 부처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11.25(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중점 추진·관리해야할 주요 민생대책을 점검하였다.
 - * 참석부처 : 기재부·교육부·행자부·복지부·고용부·산업부·여가부·농식품부·국토부·권익위·안전처
 - ‘민생대책 점검회의’ 운영은 어제(11.24)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 첫 회의에서는 금년 말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민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현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부처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 특히, 겨울철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폭설·한파 등 동절기 재난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안전·복지 관련 정부대책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별첨) 참고 : 주요 민생대책 점검내용

- 먼저, 정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소관 부처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특히, 경기침체·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근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받거나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법규 위반시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다.
- * (예시) 최저임금이상 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 위반시 엄정조치
- 또한, 12.9(금)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개통전 이용자 평가훈련*을 통해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 승차권 구입부터 승하차 전 과정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
-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사회에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적으로 국정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자칫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주요 민생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매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민안전·복지·일자리 등 분야별로 민생관련 정책·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주요 민생대책 점검내용

분야	주요 점검사항	소관부처
경제·일자리	서민물가 안정	기재부
	새마을금고 긴급 금융지원 및 중금리 대출 확대	행자부
	쌀 수급안정	농식품부
	김장채소 수급안정	농식품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산업부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고용지원 강화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지원	고용부
	체불임금 해소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고용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	고용부
	서민주거 안정	국토부
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편의 제고	국토부	
교육·복지	대학등록금 부담 지속 완화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교육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복지부
	가출 등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지원 강화	여가부
국민안전	지진/태풍 ‘차바’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	행자부
	동절기 교통안전대책	국토부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처
법질서·민생치안	학교 내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복지부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	권익위